



하반기 이명박의 반민주 · 반노동 공격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자

최근 이명박은 기회 있을 때마다 '친서민 · 중도 실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친서민'은 역겨운 위선일 뿐이다. 실제로는 대량해고, 복지 축소, 민주적 권리 탄압 같은 '반서민 · 반민주' 정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22조 원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위해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의 '친서민'은 용산참사 항의운동, 노무현 · 김대중 조문 정국, 미디어악법 날치기 항의 투쟁, 쌍용차 파업을 거치며 드러난 반이명박 정서와 저항에 대한 기만적 양보에서 나온 것이다. 10월 재 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친서민' 가면을 벗겨내면 여전히 이명박에게 "노동유연화"와 "기업 구조조정"이 "최대의 국정 과제"다. 이명박은 쌍용차에 이어서 곳곳에서 대량해고를 시도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늘려서 사

고 있다. 공공부문 대량해고와 함께 지난 7월 연기된 비정규직법 개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고, 복수노조 · 전임자임금 관련 노동조합법 개악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은 이 같은 '반서민' 정책이 불러 올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도 지속할 것이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해 이메일 · 웹서핑 · 메신저까지 감청하는 등 저들은 마녀사냥 준비에 여념이 없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한나라당은 집시법 · 마스크법 ·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 등 반민주 악법의 통과를 공언하기도 했다.

위기의 책임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공격에 맞선 우리 측의 반격이 필요하고 민주노총이 이런 투쟁 조직에 앞장서야 한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친서민' 가면을 쓰고 노동자 · 서민 죽이기에 혈안인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 가 되어야 한다.

다행히, 오늘 제출된 하반기 사업계획에도 반노동 · 반민주 악법 통과 저지 투쟁이 주요 과제로 제시돼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악법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 보다는 저항이 약할 것 같은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수 있다. 복수노조 · 전임자임금 문제와 다른 노동 · 민생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투쟁에 덜 적극적이었던 민주노조 운동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두 법안을 분리해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권리 탄압 시도는 노동운동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민주적 권리 억압은 생존권 투쟁을 불가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반노동 악법과 반민주 악법 모두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를 유보하는 대신 비정

규직, 정리하고 확대를 받아들이라는 식의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노동운동의 분열과 약화를 낳을 이런 타협도 절대 없어야 한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서 철도, 가스, 발전 등 3사 노조가 공동투쟁을 선포했고, 하루 파업을 벌인 철도조합원 5천 명이 모여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런 투쟁에 실질적인 연대 투쟁 조직을 준비해야만 한다. 특히 공공부문 사유화와 시장화에 맞선 투쟁은 해당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투쟁인 동시에 전체 서민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런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해 노동자도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들과 정부에 있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서 저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임성규 위원

장이 내세우는 '사회연대노총'은 사회연대를 위해 노동자 일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선 절대 안된다. 사회연대를 위한 더 강력한 단결과 투쟁을 뜻해야 마땅하다.

노동자 양보론은 아무런 실익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운동의 혼란만 야기해 투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경제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맞선 강력한 투쟁조직에 나서야 한다.

명에 회복

쌍용차 파업 이후 보수우파들은 노동자들이 당분간 저항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무현 사망 정국과 미디어법 날치기 항의 투쟁으로 치솟았던 정치적 투쟁과 쌍용차 투쟁을 결합시키지 못했고, 민주당의 중재안 정도에 머무르며 쌍용차 투쟁을 전국적 연대 파업으로 확대시키지 못했다.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이라는 분명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국적 노동자 연대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당시 쌍용차 구사대는 선무방송을 통해 '오늘도 민주노총이 경찰들에게 산산이 부서졌습니까? 아직도 그들을 믿고 그들을 기다리십니까?'라며 쌍용차의 투사들을 힘빠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하반기 투쟁에서는 이런 오류를 피하며 민주노총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명박에 맞서 협상보다 투쟁을 분명히 중심에 두면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결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MB 퇴진을 목표"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4개 진보정당과 한국진보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등 주요 진보민중단체들이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를 만들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공동투쟁본부의 지적처럼 이명박을 물러서게 하려면 "5만~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단호한 투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한다.



협상과 중재보다는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건설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혁신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노총 중앙간부의 성폭력 사건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충격과 냉소를 불러왔다. 촛불운동과 쌍용차 파업에서 드러난 민주노총의 무기력도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자아냈다.

쌍용차 파업에서 민주노총은 하루 총 파업조차 조직하지 못했고, 급기야 임성규 위원장은 "무조건 강경투쟁만 하는... 노동운동도 변신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도 했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투쟁의 날을 무디게 만들고 노동자들 사이에 냉소와 무기력만 조장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분명히 반대하고 강력한 투쟁을 호소하고,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운동의 부문주의와 경제주의는 경제 위기 속에 이런 투쟁을 건설하는 데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에도 5월 16일 화물연대의 위력적인 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에게 한달 동안이나 시간을 벌여주며 투쟁 조직을 연기했다. 그동안 쌍용차 파업과 노무현 사망 이후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고 있었는데 말이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조문 정국에서

"거리시위와 노동계 투쟁이 맞물리"는 사태를 걱정하던 지배자들의 우려 속에서도 5월 27일 예정돼 있던 건설, 철도, 화물연대 등의 공동시위를 연기하고 축소했다.

5월 29일 시청광장을 메우고 3만여 명이 밤샘 시위를 벌이는 동안 민주노총은 그 자리에 없었고, 급기야 5월 30일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반정부 시위대가 각각 따로 집회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시위가 절정을 이뤘던 6월 10일에 민주노총은 이 시위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면서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하고 동원했어야 했는데, 이런 시도는 없었다.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수십만 시민들의 열원 속에서도 고작 2시간 파업만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한계를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상층 지도부의 관료화도 문제다. 금속비정규투쟁본부 김형우 본부장도 "고인물은 썩는다. 중앙 간부들이 현장으로 순환되지 않음으로써 현장과 멀어지게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쌍용차 파업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주요 지도자들은 중재와 협상 창구 역할에 치중했다. 중재자 노릇을 하며 "선제적 양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쌍용차

의 투사들을 실망시켰다. 따라서 협상과 중재보다는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건설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부는 위로부터 타협의 압력보다 현장조합원들의 요구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그 점에서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유예안이 상정된 것은 유감이다. 직선제 유예 혹은 폐기 주장은 '부정선거나 잡음이 우려된다'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지 말자'는 말처럼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대의원 직선제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물론 직선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타협적인 우파 지도부가 당선할 수도 있으며, 직선으로 선출한 지도부라도 위로부터 타협의 압력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투쟁적인 지도부도 현장조합원들 스스로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진정한 민주적·좌파적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현장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 투쟁을 바탕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등 노동자 연대와 무엇보다 경제적 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전 국가적 문제를 놓고 발언하고 투쟁하는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진보정당을 억지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단결을 해칠 수 있다

진보정당 통합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이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 정당준비모임(사노준) 등이 공동 성명서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민주노총 진보정당통합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도 민주노동당 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동운동 좌파가 조직 통합에 반대했다. 실질적인 투쟁 과제를 놓고 연대와 단결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이다. 다함께 역시 토론회에 참여해 이런 주장을 펴 왔다.

배타적 지지 방침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난 10년간 이 방침은 분명히 정치적 의의가 있었다. 자본가 야당을 주로 지지해 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독립적 노동자 진보 정당을 지지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진보정당이 여럿 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지가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방침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

을 조장할 수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통합 추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다 악화시킬 뿐이다. 억지 통합 추진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권을 관료적으로 억누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동 투쟁 기구와 진보 선거 연합 등을 통해 얼마든지 연대와 단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합을 강제하는 것은 패권주의로 여겨져 반발만 살 뿐이다.

진정으로 단결을 강화하는 방안은 노

동계급이 직면한 투쟁 과제를 놓고 공동의 활동을 추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앞장서 건설하고 있는 'MB퇴진 공투본' 등에서 공동 투쟁을 수행하면서 단결의 힘을 배가시키고 협력과 상호 이해를 늘리는 것이다. 10월 재보궐과,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도 한나라당에 맞서며 민주당과도 구분되는 진보진영 선거 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운동진영의 힘을 한데 모아 야 한다.